

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내용과 의미

“쇠고기 파동 모두 제탓”... 세차례 고개 숙여

22일 취임 87일 만에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의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솔직히 사과하고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라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최근의 쇠고기 파동에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는 추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복잡해지고 있다.

◇쇠고기 파동 사과=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숨구스럽다', '가슴 아프다', '모두 저의 탓' 등의 표현과 고개를 세차레나 숙이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이 정부의 미흡한 대국민 설명 등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유감 표명 배경에는 쇠고기 파동이 한미 FTA 비준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각별히 당부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의 상당 부분을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국가 경제가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통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비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통부재·대국민 설명 부족 인정
국정 쇄신책 구체적 언급은 없어

이준호 통상교역으로 먹고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통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비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17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미 FTA 조기 비준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쇄신책=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기대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는 일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며 "하드웨어를 고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것이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며 인적쇄신 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에 우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대해 인적 쇄신에 나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오는 인정하지만 인적 쇄신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습 스케줄

대국민 담화(5월 22일)

- 쇠고기 파동: 국민과의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의 조속한 비준 호소

인사 쇄신(6월 3일께 예정)

- 당·장·청 시스템 정비: 청와대 정무 및 홍보진용 개편
- 국무총리실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

국회 개헌 연설(6월 5일 예정)

- 여야 관계: 새로운 여야 협력 모델 촉구
- 국정 여전다 조정: 공기업 개혁 등 주요 현안 발표

국민과의 대화(6월 5일 이후)

- 대국민 직접 접촉 및 소통 방안 시행

경제 활로찾기 ... 긍정 효과 강조 李대통령

전업농 육성 ... 피해 계층 떠안기 盧전대통령

■ 전·현직 대통령 FTA 담화 차이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전현직 대통령의 담화는 내용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FTA 소외 계층' 지원 대책을 언급했지만 원본적 수준을 넘어서는 아니었다는 평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년여 전 담화에서 FTA 발효시 예상되는 타격 계층의 우려 해소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반면, 작년 4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보다는 한미 FTA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계층의 우려를 해소하는 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수출과 외국인 투자자가 늘고 국민 소득이 올라간다. 무엇보다 3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농업분야에서 돼지고기는 가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철폐 또는 인하기간을 뒤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기간을 확보했다"며 "농가 소득보전과 폐업보상 등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곧 한미 FTA"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농업분야에서 돼지고기는 가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철폐 또는 인하기간을 뒤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기간을 확보했다"며 "농가 소득보전과 폐업보상 등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곧 한미 FTA"라고 말했다.

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 못한 분야가 있으면 정부가 구조조정과 실업이 생기면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與 "FTA 반대 명분없다" 野 "진정성 없는 담화"

■ 여야 '대국민 담화' 반응

이명박 대통령의 22일 대국민담화와 관련, 여야 반응은 '극과 극'으로 크게 엇갈리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나선 만큼 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에 반대할 구실이 없어졌으며 17대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정국에 대한 본질을 외면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달된 담화였다"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대통령의 절실한 마음도 잘 드러났다"고 평했다.

◇야당=민중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한마디로 본질적 해답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담화"라며 "대국민 사과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오늘 담화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한미 간 검역주권이 회복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은 반드시 제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협박한 안하느니만 못한 담화"라면서 "잘못된 협상에 대한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와 제협상에 대한 결심이 담겨야 했는데 이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반복했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당=강제협 한나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청문회와 추가협약, 검역주권 명문화, 영수회담 뿐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를 담은 담화문까지 발표되는 등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실행됐다"며 "이제 FTA를 지지할 명분이 없어진 만큼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조윤선 당 대변인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국민 불안 등에 자신의 책임임을 밝히고 사과한 대통령의 진심이 전

“수도권 정책 지방 생존권 위협”

지역균형발전협·지방의회협, 지방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촉구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 국회 의원, 지방의회 의장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모임인 '선 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논리에 의해 뒷걸음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온 지방의 숨줄을 조여 수도권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시대 착오임에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 행복도시 축소 등 무책임한 소문들이 난무한 가운데 유치 기업마저 수도권 유턴 조짐이 보이고 있어 지방의 황폐화가 시작됐다"며 "지방의 희생요구하는 빛나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의정단체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등의 단체와 공조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 제정을 저지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수도권 13개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레싱턴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 미래가 달린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모임 후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난 40여 년간 유지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정책방향을 틀림으로써 수도권 과밀과 지방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책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또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라"면서 "혁신도시 건설도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서 지역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이어 "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조치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비수도권 광역의회 의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도 이날 강원 춘천 세종호텔에서 정기회 모임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은 경

안전하고 맛있는 한우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우를 아껴주시는 국민여러분의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한국 20만 한우유가 협회(한우유가협회)